

총장칼럼

지방대학은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장병집 | 충주대학교 총장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로 대표되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학의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을 비롯한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대학가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감사원에서는 올 2학기부터 등록금 인하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감사인력을 총동원하여 국립대학,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저인망식 감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머지않아 닥쳐 올 학생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위원회를 지난 7월 출범 시키는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69만여명으로 최고점을 찍는 고교졸업자수가 이후 급감하여 2021년이면 47만여명으로 약 22만여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입학정원이 현재의 58만명을 유지한다면 11만명의 학생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된다. 게다가 고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현재의 79%에서 10년 후엔 약 73%로 축소된다는 분석을 적용할 경우 20만명 이상의 절대적인 입학수요가 부족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2,000명의 입학정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 100개 이상이 학생을 채우지 못해 폐교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딱하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은 정원의 50%

도 충원하지 못해 사실상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는 대학이 하나 둘이 아니다. 오죽하면 남쪽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대학 문을 닫을 것이고 북쪽에서는 단풍지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면서도 정부나 대학 스스로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대학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대학의 수를 감축하겠다는 의도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평가지표를 통해서 대학평가를 한다면,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부터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각 지역마다 유사 깊은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지방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던 대학마저, 부와 인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로 대학의 명성은 물론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생 미충원이 입학생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또 재학생의 끊임없는 수도권으로의 유출로 말미암아 결국 졸업생 취업난으로 귀결되어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끝없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단순한 대학 평가에 의한 대학구조정은 지방대학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대학의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먼저 지방의 역사적 전통과 산업을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학과의 나열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의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A대학의 a학과나 지방의 하위 대학으로 평가되는 B대학의 b학과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 두 대학의 졸업생 중 누구를 채용할 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이 분명해진다. 지방대학은 무엇보다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통해서 인재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때만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을뿐더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학 역시 어느 일반대학과 다른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대학의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학의 성격에서 벗어나 특성화를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즉 우리대학은 우리나라 속에서의 경쟁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 의왕에 소재한 한국철도대학과의 통합을 통하여 교통-철도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해온 것이다. 교통-철도분야는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Emerging Market임에 틀림이 없으나 국내에는 이 분야의 특성화 대학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최근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두 대학의 통합이 성사단계에 와 있으며, 교명도 특성화를 반영하여 한국교통대학교로 이미 정해 놓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교통-철도분야 특성화 대학인만큼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 속에서 경쟁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작금이다.

한편 지방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자치단체와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발전하는 운명공동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은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수도권 등지에 내보내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현실로 다가온 지방대학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주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주대학교 교수,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충북테크노파크 충주지원센터장, 세종시민연합동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충주대학교 총장, 충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